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남북관계 풀 수 있는 好機다

조 민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마침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였다. 미 국무부가 1987년 12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20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10·3 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밝힌 ‘2·13 합의’가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향후 불능화가 완료되고 북·미 사이에서 합의된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을 통해 확정되면 일단 비핵화 2단계는 마무리된다.

북한은 미국의 선거 국면에서 핵실험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북핵 봉합 상태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그동안의 협상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여 결단을 내렸다. 미국 조야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에 대한 협력을 문제 삼아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예정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는 ‘2·13 합의’에 따른 불능화와 신고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하면서, 검증은 다음 단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을 주장해왔다. 최근 평양의 북·미 회담(10.1~3)에서 제시된 ‘순차적 분리검증안’을 미국이 수용한 데에서 타결점이 마련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이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미신고시설 문제 등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검증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비핵화 2단계에서의 검증은 신고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미신고 시설이나 UEP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서 추후에 추진할 과제로 분리한 방식이다.

순차적 분리검증안으로 미국과 북한 양측은 모두 협상 타결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미국은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는 국무부 대변인의 자족적(自足的)인 평가가 가능했다. 또한 북한은 검증 자체에 대해서 한 발짝 양보했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핵시설 불능화 대상들에 대한 검증에 협력한다”(10.12)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검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했다. 이처럼 검증 문제는 검증의정서 작성과 이행 실천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북핵 문제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북한의 비핵화야말로 ‘선결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미·북간 관계개선의 신호탄으로, 6자회담의 진전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기대된다. 향후 북한은 미국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본격적인 평화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미국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핵문제가 진전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수단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을 적극 검토

해야 할 때라고 하겠다.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비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남북경협과 연계시키는 정책은 아니다. 이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생활향상 등 대북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므로 단계별 접근 방식에 기반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가동한다면, 지금부터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료 시점에 조용하여 제1단계 남북협력 사안 즉,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을 준비할 때이다.

남북관계는 풀어야 한다.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가 문제며, 먼저 양보하는 측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 북·미간 신뢰회복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역학구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남북관계의 경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단계의 북핵 문제 진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푸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가동해야 한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1조 3천여 억 원 중 현재 10% 남짓 집행되었다. 올해 안에 이 남북협력기금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제의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차관도입을 위한 대북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당장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제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무엇보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기구로부터 차관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미국의 정치적 결단이나, 또는 남한의 적극적인 협력과 보장은 차관 문제 해결을 급진전시킬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남북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환영하면서, 이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풀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